

우리의 提言

정부·농협·제조업계에 대하여 농약 사용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기술자협회 전무)
鄭長燮

농약연보(1979년판) 머리말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바와같이 농약사용으로 인한 쌀의 증수효과는 22.1%로서 농약없는 농사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 일단 받아들인다.

농약과 비료는 현대농업기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자재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볼때 농약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공해요인임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수도 없다.

농약관리법 제1조 「목적」에서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농약 안전사용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농약공업협회에서 「농약과 식물보호」지를 창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심으로 환영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과 비료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농수산부에서 발행한 농림통계 연보에 의하면 쌀 10a당 생산비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비가 1971년에 391원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1977년에는 2,077원으로 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화학비료는 1971년에 816 원의 부담이 1977년에는 5,210원으로 약 6배나 불어났다. 이 기간동안에 10a당 쌀의 증수효과를 보면 1971년에 337kg이던 것이 1977년에 494kg을 생산하여 147%를 증산하였다. 방제비 5배에다 화학비료대 6배를 더 부담하여 겨우 147%의 증수효과를 올린 셈이다.

전체 쌀생산비에 있어서 농약과 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1년의 14%에서 1977년에는 20%로 향상 되었다. 농가경제와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과 화학비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점유하는가를 응변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生命產業)인 동시에 국가의 안보산업이다.

식량증산이라는 국가적인 명제(命題)를 놓고 화학비료(금비)와 농약이 증산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하여 다각적인 겟토가 요청되는 바이다.

농업생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농민이고 또 농약의 사용자 입장에서 다음 몇 가지를 간추려서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정부에 대하여

먼저 식량증산 정책의 방향전환을 바란다. 쌀 4천만석 이상을 생산하기까지 강력한 행정주도형 증산정책의 공로를 부인할수는 없다. 이제 모든 역사적인 상황이 발전의 길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 농민들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으로 보나 새 마을 운동을 통하여 보여준 자조·근면·협동의 역량에 비추어 농산물의 적정 가격보장에 의한 증산의 유통을 불러 일으켜서 자발적인 농민주도형으로 증산정책을 유도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신품종벼의 재배를 싫어 하는 경향이다. 소출이 훨씬 많이 나는 신종품을 왜들 재배를 싫어하는지 그 근본원인부터 살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 모든 문제는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있고 농가소득은 농산물가격정책과 연동(連動)한다. 농사를 지어서 수지만 맞는다면 이종자를 심어라, 저농약을

써라, 이 비료를 뿌리라고 하지 않아도 농민들은 증산에 스스로 앞장설 것이다. 자발적인 증산의 유통이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

농약관리법 제 19조(농약의 수급)와 제 20조(농약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에 근거한 농협을 통한 농약의 수급과 유통상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이미 비료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부로 농수산부에서 종래의 기준조(基準組)판매제도를 철폐하고 농민들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였다.

농약은 비료와 같이 기준조판매라는 제도적 문제점은 없었다. 일선 단위농협으로 하여금 농민들의 의사로 바탕으로 종류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두개하고 농민들이 필요 한 농약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공동방제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농약관리법 제 9조에 의거한 판매업자가 전국에 5천점포나 있다고 들었다. 농약판매업자들에 게도 충분한 종류와 물량을 자유로이 유통시켜 활성화하고 농협과 유통구조를 양립시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원활을 꾀할 일이다. 정부는 농약의 철저한 품질검사와 품질관리의 감독기능을 강

화하여야 한다.

농협에 대하여

농협에 대한 제언은 정부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지엽적(枝葉的)인 몇 가지만 거론한다.

농약이 제조업자로부터 농민들 손에 들어가기 까지의 유통경로를 보면 농약판매업자들 보다 농협이 훨씬 시일이 더 걸리는 것 같다.

병충해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다기하고 돌발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이때 농협에 달려가면 원하는 농약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들 한다.

게다가 일요일, 공휴일에나 출퇴근시간이란 제약이 있으니 농민들은 농약판매업자들을 찾게 된다.

농약판매업자와는 안면이 있고 신용이 인정되면 급할 때 손쉽게 의상거래를 할 수도 있다.

농협의 여러 업무 중에서 농협직원들은 농약취급을 모두 싫어하는 눈치이다. 농약취급자는 사람의 질병에 비유한다면 의사와 약사와 간호원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농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충해에 대한 전문지식도 서비스정신도 부족함을 농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이 농약의 재고처리

를 위해서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또 병충해도 없는데도 예방을 내세워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일이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바는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제조업계에 대하여

농약판매업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상품명으로 2백여 종이 있어야 대충 절포로서 구색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농약연보(1979년판)에 의하면 56개 농약명에 210개 품목에 무려 250개의 상표명이 수록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정제 정도인데 이처럼 복잡다양하다. 인간과 병충해와의 투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농약의 품목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보자. 벼도 열병약은 17품목에 11상표, 벼이화명나방약은 15품목에 20상표, 과수 용액약은 18품목에 27상표, 논작초약은 18품목에 18상표명이 있다. 이 많은 유사농약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써야 할지 농민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표어를 내어걸고 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 모르고 오용말고, 약 좋다고 남용말자” 농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표어이다. 농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농민(설사전문지식이 있어도)이 발생한 병충해에 대하여 적당한 농약을 적기에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오용(誤用)으로 약효가 없다고 하고 또 남용(濫用)과 과용(過用)으로 약해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심하면 인명에 까지 피해를 미친다.

倜같은 이야기이지만 인축(人畜)과 자연환경 보전에 해독이 없는 그야 말로 무공해농약의 개발은 불가능한지 안타까운 일이다. 효능이 복합적이고 사용하기 간편한 농약의 개발을 제조업체에 제언하는 바이다. 벼이화병나방과 도열병, 벼멸구와 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나와있다. 발생빈도가 많고 시기가 비슷하고 피해지역이 넓은 병해충을 단일제제(製劑)로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농약제조업체가 힘을 합해서 재단법인체로 독립된 연구기관을 창설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농약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연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의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를 전담케 하길 바란다. 그리고 또 재단법인의 기능

가운데 의료보험에 준하는 농약재해 보험 같은 제도를 두어서 농작물의 약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한 진료와 보상을 맡기면 좋을 것이다. 획기적인 병충해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병충해의 이름을 통일하여 사용하길 바라며 농약의 상품명은 되도록 외래어를 피해서 부르기 쉽고 의우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었으면 한다.

농약의 안전사용을 지도하기 위해서 「농약과 식물보호」가 이제사 창간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농약공업 협회의 단순한 기관지가 아니라, 농약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업자와 사용자인 농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광장으로 육성되길 바란다.

지면의 배분(配分)에 있어서도 제호가 표방하는 그대로 농약과 식물 보호를 반반씩으로 하되 오히려 생활환경 보전이나 식물 보호쪽에 더 비중을 두어서 편집하여 줄것이며 농약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공정한 입장에서 다루어 주길 바라는 바이다.

